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철학적 논증 가능성

양 천 수*

I. 문제제기

‘인권’은 흔히 ‘인간이면 그 누구나 평등하게 가질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통상적인 인권 이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은 ‘보편성’을 핵심적인 특성이자 요소로 삼는다.¹⁾ 여기서 보편성이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권리의) 주체나 상대방이 그 누구인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내용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인권은 보편적이다’는 명제는, 그 인권이 중세이든, 근세이든 아니면 현대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남성이 주장하든, 여성이 주장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 명제는 아주 ‘강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내용이 동일하며 타당한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한’ 성격을 갖는 인권의 보편성 명제는, 바로 이러한 ‘강한’ 성격 덕분에 오늘날까지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힘입어, 근대 시민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 밖에 각종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려는 사회변혁 운동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²⁾

그러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권은 보편적이다’는 명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 즉 어떻게 이 인권의 ‘보편성’을 철학적으로 근거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와 같이 서로 이질적이면서, 때로는 모순적인 가치나 신념들이 양립하는 다원적인 사회에서, 과연 보편적인 그 무엇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³⁾

* 영남대 법대 교수

1) 김도균, “인권의 개념과 원리”,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2006, 86쪽.

2) 이에 관해서는 임재홍, “근대 인권의 확립”,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2006, 27쪽 아래.

3) “처분불가능성”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다루는 양천수, “법문화와 처분불가능성”, 『중앙법학』 제8집 제3호(2006. 10) 참고.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인권의 보편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서구 중심적인 사고가 낳은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대신 아시아에 고유한 “아시아적 가치”를 근거 지으려는 이론적 움직임이 전개되기도 한다.⁴⁾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지으려 했던 종전의 철학적 논의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인권의 보편성은 어떻게 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종전의 논증방식

인권은 근대가 태동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따라서 인권은 근대가 태동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상적 조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 가운데서 근대의 자연법사상, 사회계약론 그리고 독일 관념론의 이성법 전통은 인권 개념이 성립하고 섬세하게 발전하는 데 큰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했다. 여기서는 인권의 보편성과 많은 관련을 맺는 자연법사상, 로크의 소유적 인권이론 그리고 칸트의 정언명령과 이성법 개념을 다루도록 한다.

1. 자연법을 통한 논증

우선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던 종전의 논증방식으로서 ‘자연법을 통한 논증’을 언급할 수 있다.⁵⁾ 변화하는 현상계 저 너머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정당한 법, 즉 자연법이 있다는 주장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래 서구의 많은 사상가들을 지배하였다.⁶⁾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인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은 변화하는 현상계와, 변화하지 않는 본성계, 즉 자연법을 대비시키면서, 자연법을 본질적이며 더욱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은 서구가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독교와 결합하여 신학적인 자연법으로 변모한다. 즉 자연법을 기독교의 야훼와 동일하게 봄으로써, 자연법에 신학적인 색채를 덧붙였다. 중세가 끝나가는 즈음,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기독교와 자연법사상이 분리되어 가고, 이를 통해 인간의 ‘이성’이 기독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여

4) 이에 대해서는 우선 이근관,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인권의 보편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2002 참고.

5) 백봉흠,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국제법상 인권보장의 유래”, 『가톨릭사회과학연구』 제2집; 양준모, “자연법과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제51호(1982), 430쪽 아래.

6) 이러한 자연법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박은정, 『자연법사상』, 민음사, 1987.

전히 자연법사상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던 근세를 지탱하는 철학적인 기반이었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을 주장한 근세의 자연법론자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H. Grotius) 등에 의해, 이제 인권사상이 서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⁷⁾

이러한 자연법사상은 보편적인 인권을 논증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왜냐하면, 인권을 자연법의 핵심내용으로 인정하면, 자연법사상의 보편적인 성격에 힘입어, 인권의 보편성도 쉽게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자연법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권을 근거 짓는 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단체는 ‘신학적인 자연법사상’을 원용하여, 인권의 보편성이나 처분불가능성을 주장한다.⁸⁾ 또한 현대 헌법의 기본권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의 공법학자 칼 슈미트(C. Schmitt)가, 로마 가톨릭의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두어 기본권을 자연법적인 인권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⁹⁾ 나아가 많은 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자연법사상은 인권의 보편성이나 불가침성을 근거 짓는 데 중요한 논증도구로 원용되고 있다.

2. 소유권에 기한 논증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던 두 번째 방식으로 ‘소유권에 기한 논증방식’을 거론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경험론자이자 사회계약론자인 존 로크(J. Locke)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¹⁰⁾ 넓게 보면, 이 논증방식 역시 위에서 언급한 ‘자연법을 통한 논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로크 역시 인권을 “자연권”이라는 이름 아래 근거 지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크가 사용한 논증방식은 한편으로는 자연법사상의 전통을 따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의 자연법사상과는 차이가 있는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에 서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을 통한 논증’과 차이가 있다. 또한 - 임재홍 교수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 전통적인 자연법사상과는 달리,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자연권사상은 사회비판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¹¹⁾

그러면 로크는 어떻게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는가? “안전국가”를 정립한 홉스(T. Hobbes)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자연상태”를 상정한다. 그러나 이 자연상태는,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¹²⁾ 로크가 예정하는 자연상태는 “인간의 이성의

7) 이에 대해서는 이문조/양삼석, “근대 초기 자연법사상의 전개: Ockham에서 Pufendorf까지”, 『영남대 사회과학연구』 제13집 제2권 (1993) 참고.

8) 가령 손규태, “인권문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 『기독교사상』 제379호(1990), 178쪽 아래; 김찬국, “인권의 성서적 근거”, 『기독교사상』 제189호(1974), 29쪽 아래.

9) 이에 관해서는 칼 슈미트, 김효전 역,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교육과학사, 1992.

10) 이에 관해서는 이상돈, “근대적 인권 개념의 한계”, 『고려법학』 제44호(2005), 115쪽 아래; 임재홍, “근대 인권의 확립”, 20쪽 아래.

11) 임재홍, “근대 인권의 확립”, 19쪽.

법칙인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는 상태”를 말한다.¹²⁾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자연권을 조화롭게 주장하고 누릴 수 있다. 이 때 로크가 강조한 자연권은 “생명”, “신체”, “재산”이다. 이러한 권리를 통틀어 로크는 “소유권”(the right of property)이라고 한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상관없이 자연상태에서 조화롭게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소유권이다. 말하자면, 자연권인 소유권은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는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로크가 말하는 소유권을 우리는 오늘날의 인권으로 바꿔 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할 수 있다. 이러한 로크의 논증방식은, 인권을 소유권의 성격을 갖는 자연권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에 기한 논증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정언명령을 통한 논증

마지막으로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칸트가 사용한 논증을 다룰 필요가 있다. 칸트는 단순히 인권을 넘어서, “보편성”이라는 철학적인 속성에 관해 많은 공헌을 한 철학자이다. 칸트가 실천이성에 바탕을 둔 도덕철학을 전개하면서 제시한 “정언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은, 종전의 자연법사상이나 소유 중심의 사회계약론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도덕의) 보편성을 근거 짓는 것을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칸트가 정립한 법 개념은 근대 “자유주의 법모델”이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¹⁴⁾

그러면 칸트는 어떻게 인권의 보편성을 정당화하는가? 칸트는 종전의 자연법사상이 원용한 초월적인 자연법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로크가 행한 것처럼, 소유라는 측면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지도 않는다. 칸트는 기존의 논증방식이 간과하고 있었던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한다. 이러한 칸트의 인권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칸트의 도덕이론, 특히 “정언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칸트는 인간이 지닌 실천이성에 바탕을 두어 도덕이론을 시작한다.¹⁵⁾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실천이성을 지닌 이성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자율적인 선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도, 이렇게 인간이 실천이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심재우, “Thomas Hobbes의 법사상”, 『법사상과 민사법』, 1979, 61쪽 아래.

13) 임재홍, “근대 인권의 확립”, 23쪽.

14) “자유주의 법모델”에 관해서는 이상돈, 『법학입문』, 법문사, 2006, 41쪽 아래.

15) 칸트의 도덕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법률행정논집』 제12집 (1974), 103쪽 아래.

이런 칸트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율’이 전면에 선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율, 즉 자유가 칸트 도덕이론과 인권이론의 핵심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¹⁶⁾

그런데 칸트는 인간의 자율성이 - 자연법사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 일종의 자연법으로서 당연히 보편화된다고 파악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 로크처럼 - 인간의 자율성을 소유권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보편화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칸트는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자율성을 보편화하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언명령”을 통해 성취된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 혹은 “조건명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명령을 뜻한다. 칸트는 이러한 정언명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마치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¹⁷⁾

이 정언명령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칸트가 어떻게 주관적인 자율성을 보편화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 사람의 주관적인 준칙(자율성)은 “보편적인 자연 법칙”에 합치하는 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은 종래의 자연법과는 다른 그 무엇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법칙을 말한다. 바꿔 말해, 칸트가 말한 “보편적인 자연 법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볼 때 타당한, 즉 ‘상호주관적인’ 법칙을 뜻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칸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서 인간의 주관적인 자율성, 즉 인권을 보편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이렇게 칸트는 인권을 종전의 논증방식과는 달리, 상호주관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정언명령을 통해 근거 짓는다. 이런 칸트의 논증방식은 그의 법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칸트는 한편으로는 도덕과 법을 구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도덕철학에서 강조한 “자율성”을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6)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칸트 자신이 어떤 ‘인권이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칸트의 도덕철학을 현대의 인권이론에 대입해 보면, 일정한 모습을 가진 ‘칸트의 인권이론’을 그려볼 수 있는 있을 것이다.

17) 임마누엘 칸트, 이원봉 옮김,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2, 72쪽.

18) 칸트의 정언명령을 “보편화 원칙”으로 이해하는 경우로서 J.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Frankfurt/M. 1991, S. 12.

19) 물론 칸트의 “정언명령”이 종전의 자연법사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의 법철학자인 베르너 마이호퍼(W. Maihofer)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공존질서”의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언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상호주관적인 면을 드러낸다(베르너 마이호퍼, 윤재왕 옮김,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지산, 2003, 13쪽 아래). 이에 반해 독일의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인 쉴만(K. Seelmann)은 칸트의 법개념을 ‘자연법적’이라고 평가한다(K. Seelmann, 윤재왕 옮김, 『법철학』, 지산, 2000, 86쪽).

“법이란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총체이다.”²⁰⁾

위의 법 개념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칸트의 법 개념에서는 “자의”(Willkür), 즉 “자연적 자유”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칸트의 법 개념이 자유주의 법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칸트의 법 개념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고려한 ‘상호적인 자유’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법은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의 총체이며, 이 점에서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내가 갖는 자유의 보편성은 타인이 갖는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상호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정언명령”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는다. 나아가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법임을 법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보여준다. 이제 인권의 보편성은 형이상학적인 자연법이나, 개인의 소유가 아닌, 상호적인 차원에서 논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II. 기존의 논증방식이 지닌 문제점

그러나 이렇게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던 종전의 방식은,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철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종전에 원용했던 논증방식이 서 있던 철학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설득력도 퇴색하고 있다.

1. 자연법의 확실성 상실

먼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연법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자연법사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식론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자연법사상이 상정하는 전제,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실체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가치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이념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가치상대주의는, 오직 유일하게 타당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

20)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1797), *Einleitung in die Rechtslehre*, § B, S. 337.

으며, 각각의 가치는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원주의는, 각기 상이한,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가치나 이념, 주장 등이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치상대주의나 다원주의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정당성 체계가 있다고 말하는 자연법사상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셈이다. 둘째, 설사 자연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이 자연법을 발견하고, 승인할 권한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플라톤이 강조한 것처럼, 오직 철학자인 왕만이 자연법을 알아볼 수 있고, 승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독재를 버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오늘날의 정치체제에서, 그런 철학자인 왕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론적인 문제 때문에,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두어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서구에서 성장한 인권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역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은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고 반발한다. 오히려 서구 중심적인 인권과는 구별되는 “아시아적 가치”를 독자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적이며, 따라서 ‘문화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소유권에 기한 논증의 문제점

나아가 존 로크가 사용한, 소유권에 기한 논증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인권의 보편성을 소유권에 근거를 두어 논증하는 것은, 생명·자유·재산 등과 같은 소유적 인권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정치적 참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²¹⁾ 그러나 인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유적 인권을 넘어서, 정치적 인권 역시 인권 개념 안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권과 정치적 권리, 즉 주권 사이에는 긴밀한 내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²²⁾ 그런데도 만약 소유적 인권만을 자연권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만 보편성을 인정하려 한다면, 인권은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소유권에 기해 논증하면, 사회경제적인 인권의 필요성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로크가 사용한 논증방식은 ‘자유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유에 초점을 둬으로써, ‘연대성’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인권을 시야에 넣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로크가 사용한 논증방식이 정치적 인권과 사회경제적 인권을 간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현대 영미 철학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

21) 이를 이상돈 교수는 “주권적 정치참여”가 “결핍”되어 있는 “정치적 소외”라고 말한다. 이상돈, “근대적 인권 개념의 한계”, 122쪽 아래.

22) 이상돈/홍성수,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고려법학』 제42호(2004), 77쪽 아래.

쟁”에서 보면, 로크가 원용한 논증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자유주의”에 서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주의에 근거를 두어,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지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에 던진 문제를 그대로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에 대해 공동체주의가 던진 문제는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및 이에 관련한 권리를 보편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의하면, 보편적인 도덕, 보편적인 법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라도 존중해야 할 보편적인 핵심도덕을 이루고, 이 자유를 법으로써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문화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인권은 당연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보편적인 도덕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도덕(혹은 윤리)은 각기 상이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중요성이 결정된다. 바꿔 말해, 보편적인 도덕 대신 상대적인 윤리가 전면에 등장한다.²³⁾ 이런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어떤 보편적이고 통일된 법체계를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신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다원적인 법체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자유주의적인 법체계는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서구 중심적인 법체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인권이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공동체주의의 시선에서 보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관념은 그야말로 ‘서구 중심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 정언명령을 통한 논증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칸트가 사용한, 정언명령을 통한 논증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칸트 역시 자유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칸트의 도덕철학이나 정언명령에서는 - 비록 상호주관적인 면을 끌어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 개인의 주관적인 자율성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령 정언명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네 행위의 준칙”과 같은 주관적인 자율성이 중심이 된다. 또한 법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주체가 갖는 “자의”가 중심에 선다. 그렇다면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기 위해 칸트의 정언명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자유주의가 지닌 문제를 넘어서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칸트가 사용한 정언명령은 ‘형식적’이다.²⁴⁾ 주관적인 행위의 준칙을 “보편적인 자연법칙”에 맞출 것을 요청하지만, 이 “보편적인 자연법칙”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 “보편

23) 보편적인 도덕과 상대적인 윤리라는 등식은, 도덕과 윤리를 개념적으로 인정할 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구별하는 점에 대해서는 J.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S. 100 ff.

24) 바로 이런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헤겔은 ‘실질적인 윤리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J.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S. 9 ff.

적인 자연법칙”을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달리 말할 수는 있지만, 다시 여기서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사람들이 타당하게 여기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정언명령은 인권을 어떻게 보편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지만, 이러한 정언명령이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주관적인 자율성, 즉 인권을 보편화할 수 있는지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IV.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기 위한 새로운 시도

위에서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던 종전의 논증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보면, 현대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는 것은 철학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인권은 보편성을 상실해야 하는 것일까? 인권은 이제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서, 인권이 필요한지 여부는 각 공동체에서 결정할 그런 “처분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실천적으로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보면, 인권은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인권이 지니고 있는 ‘사회비판적인 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하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인권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²⁵⁾ 요컨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인권은 아직 필요한 그 무엇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전과는 달리 다원화된, 각기 다양한 사회체계가 분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를 논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1. 출발점: 정언명령

일단 결론부터 말한다면, 오늘날에도 인권의 보편성은 여전히 근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인식론적 지평’ 위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새롭게 근거 짓고자 한다고 해서, 과거의 논증방식과 완전히 절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논증방식과 예전의 논증방식, 그 중에서도 정언명령을 통한 논증방식 사이에는 내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달리 말해, 새로운 논증방식

25) 가령 한인섭/양현아(편),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참고.

은, 칸트가 원용한 정언명령을 통한 논증방식을 일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인권의 보편성을 새롭게 논증하고자 하는 시도는, 칸트의 정언명령이 담고 있는 ‘보편화가능성’을 수용한다. 즉 새로운 논증방식은 정언명령이 추구하는 보편화 가능성, 즉 “객관적 법칙”에 “주관적 준칙”을 합치시켜 보편화를 이루려 하는 관점을 수용한다. 둘째, 새로운 논증방식은 정언명령에서 읽을 수 있는 ‘상호주관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며 한다. 종전의 자연법사상이 기반을 두고 있던 “주체-객체 인식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호주관적인 인식 모델” 위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논증방식은 정언명령이 취하고 있는 ‘형식성’을 원용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 짓고자 한다. 새로운 논증방식은 정언명령에서 볼 수 있는 형식성을 단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형식성이야말로 새로운 근거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고 파악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논증방식은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형식적인 조건만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각 시대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려 하기 때문이다.

2. 하버마스의 “대화원칙”과 “보편화 원칙”

위에서 우리는 칸트의 정언명령이 담고 있는 ‘보편화 가능성’, ‘형식성’, ‘상호주관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권의 보편성을 새롭게 근거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철학이론이 이 세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하고 있는가? 필자는 현대 철학이론 중에서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 Habermas)가 제시한 “대화원칙”(Diskursprinzip)과 “보편화 원칙”(Universalisierungsgrundsatz)이 위 세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하버마스가 제시한 “대화원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규범은 그것이 합리적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가능한 관련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 한에서만 타당하다.”²⁶⁾

위 언명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대화원칙은 도덕적인 행위규범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도덕적인 행위규범을 정당화할 때, 합리적 대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동의가 가장 핵심적인 표지라고 말한다. 이 때 “합리적 대화”란 모든 가능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체의 외적인 장애 없이 논증적인 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에 대해 논증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합리적 대화에

26)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2. Aufl., Frankfurt/M. 1994, S. 138.

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가 가장 전면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원칙은 ‘형식성’과 ‘상호주관성’을 잘 충족한다. 첫째, 대화원칙은 어떤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합리적 대화”와 “동의”라고 하는 절차적이면서 형식적인 기준을 핵심요소로 제시한다. 둘째, 대화원칙은 합리적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가능한 관련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을 요청한다. 이는 대화원칙이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 사이에서, 다시 말해 상호주관적으로 작동하는 원칙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하버마스는 “보편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이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관련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²⁷⁾

이와 같은 보편화 원칙은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는 ‘형식성’과 ‘상호주관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좋은 해답을 제공한다. 역시 이 경우에도 핵심적인 표지는 “모든 관련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모든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편화 원칙은 정언명령이 의도하는 ‘보편화 가능성’을 상호주관성 모델을 통해 구체화한다.

3. “대화원칙”과 “보편화 원칙”을 통한 인권의 보편성 논증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원칙과 보편화 원칙은 어떻게, 여러 철학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인권의 보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선 대화원칙에 따르면, 인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 인권규범의 정당성 조건: ‘인권규범은 그것이 합리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관련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음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정당성을 획득한 인권규범은 다음과 같은 보편화 과정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²⁸⁾

27) J.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S. 10.

28) 그런데 하버마스 자신은 이러한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인권 그 자체는 법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조건이라는 이유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처분불가능성을 인정한다.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S. 155.

- 인권규범의 보편성 조건: ‘인권규범은 이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관련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보편화된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원칙과 보편화 원칙을 통해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하는 인권규범은,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하고자 했던 종전의 논증방식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쉽사리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이 방식은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을 원용하지 않는다. 자연법 대신 “합리적 대화”와 “동의” 등이 전면에 대두한다. 둘째, 이 방식은 형식적인 절차적 조건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현대의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절차적 조건만을 충족하는 한, 각 사회 공동체나 문화 공동체는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다원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인권규범의 구체적인 모습을 각기 다원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 방식은 상호주관성 모델에 바탕을 둬으로써, 소유권에 기한 논증방식이 지닌 문제점, 즉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 이유는 상호주관성 모델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이는 곧 인권이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참여권이나 사회경제적 권리 역시 - 그것이 합리적 대화과정을 통해 각 관련자들로부터 동의와 승인을 받는 한에서 - 인권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대화원칙과 보편화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권이 보편적인 것일 수 있음을 논증할 수 있다.

V.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인권은 그 자체로 침해할 수 없는, 따라서 보편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해 왔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인권의 보편성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명과 가치의 상대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무작정 긍정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논증하기 쉽지 않다. 만약 - 이 글에서 언급한 - 철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인권의 보편성을 고집하려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독단과 교만에 빠진 교조주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권의 보편성을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인권의 보편성을 새롭게 근

29) 이상돈/홍성수,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78쪽 아래.

거 지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새로운 철학 이론에 바탕을 두어 논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기획은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서, 해결하고 구체화해야 할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필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